

초등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은행 없는곳 우체국서 은행 역할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재정·조세 제도

올해부터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가 상향 조정된다. 기존 15%대였던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의 실질금리는 5~6%대로 대폭 낮아져 서민의 금융 부담이 완화된다.

또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의 주민도 우체국 등에서 은행 서비스를 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점이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재정·조세 제도'를 안내했다.

올해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의 하한선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5%→5~6%로 낮춰 서민 금융부담 완화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 41.7%로 늘리고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지방 금융공급도 확대한다. 정부의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에 따라 비수도권 정책금융 비중은 올해부터 41.7%로 확대 시행한다.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안도 본격 시행한다. 올해부터는 상호금융권에서도 은행 등 다른 금융사처럼 대출 실행 시 필요한 실비용만 반영된다.

불법사금융을 줄이기 위해 대출 체계도 개편한다. 2일부터 실질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로 대폭 낮추고, 상환방식도 만기 일시 상환방식에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변경한다. 또 1분기

중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을 도입해 단 한 번의 신고를 통해 불법사금융의 불법추심 중단, 대표통장·전화번호 차단, 수사 의뢰, 채무자 대리인 선임, 소송구제 등이 이뤄지게 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이뤄진 햇살론 체계를 '햇살론 일반'과 '햇살론 특례보증' 2개로 통합하며, 취급 업권도 모든 금융 업권으로 늘렸다.

이 밖에 1분기 중 '사망자 명의 금융거리 신속 차

단', '미성년자 결제 편의 개선' 등을 확대 개편하고, 2분기에는 은행 영업점 감소에 따라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우체국 등을 통해 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점'을 도입한다.

저출산 해소 및 혼인을 위한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책도 강화한다. 우선 오는 4월 저출산 극복 지원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의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 계약대출 이자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오는 6월에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비과세 적금상품 '청년미래적금'도 출시할 계획이다.

또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확대한다. 기존 근로자 1인 당 월 20만원이었던 보육수

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 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초등 저학년 자녀들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 지원을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만 9세 미만의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한다.

유아 무상교육 및 보육지 지원 대상도 4~5세까지로 확대한다. 오는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전면 시행한다.

이 밖에도 올해부터 '증권거래세율 조정',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 특례 확대',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조정', '지방 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무주택 주말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 허용' 등 금융 서비스가 개편·도입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홈플러스 '반값/하나 더 데이' 행사
홈플러스 모델이 신년을 맞아 떡국 재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들을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7일까지 '반값/하나 더 데이'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갈비·간고등어·한우 등 인기 먹거리 등을 최대 50% 할인하며, 일부 품목에 한해 1+1 혜택도 제공한다. <홈플러스 제공>

은행 가계대출 연초 ‘숨통’…비대면·갈아타기 등 속속 재개

오늘부터 모기지보험도 허용

새해들어 지난해 10·15 등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로 막혔던 은행권 가계대출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 등의 비대면 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고, 다른 은행으로부터 '갈아타기(대환) 대출' 등도 재개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중단된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또 오는 11일, 22일부터 각각 제한된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1·II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허용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가입이 재개되면 그만큼 지역에 따라 수 천만원 정도 한도가

늘어난다.

신한은행 역시 지난해 8월부터 막았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하나은행도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을 다시 받는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접수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재개할 예정이다. /장윤영 기자 zzang@

현장위험 자동 감지 시스템 인공지능 CCTV 모니터링 한전KPS 실증 시연 도입 나서

한전KPS는 "현장에서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인공지능(AI) CCTV모니터링 시스템' 실증 시연을 마치고 본격적인 도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한전KPS가 자체 개발해 공개한 '지능형 AI CCTV'는 지능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송전탑 및 산협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지능형 AI CCTV는 기존 단순 영상 기록 중심이 아닌 AI가 작업자의 위험 행동, 출입 통제 위반, 보호구 미착용, 이상 동선 및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한다.

특히 송전탑장에서 수행하는 고전압 작업 등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요인



한전KPS 직원들이 지난 30일 나주시 한전KPS 인재개발원에서 자체 개발한 '지능형 AI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한전KPS 제공>

들을 사전에 인식해 안전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경보를 울리고 안전 대응에 나서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 현장 안전관리 효율성

향상, 안전 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 데이터 기반 안전 의사결정 체계 구축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100만원 더 준다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봐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

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 기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 이하의 최고 530만원이다. /김혜나 기자 khn@

중기부, ‘노쇼’ 피해 소상공인 법률상담 지원

피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상담 범위를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약 부도'(노쇼·no show) 피해까지 확대하고,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쇼 피해가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 같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분쟁 대응 방향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쇼 피해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해 피해 발생 추이와 업종·지역별 특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소상공인 노쇼 피해 예방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중기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외식업 점포 214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간 노쇼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피해를 본 점포들은 3년간 노쇼 피해가 평균 8.6회 발생했다고 했다. 노쇼 1회당 평균 손실액은 4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또 피해 점포의 35%는 노쇼 피해 이후 손해 배상 청구나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점포의 95%(중복 응답)는 예약을 전화로 받는다고 했고, 예약 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이와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노쇼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18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해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제한하던 외식업종의 노쇼 위약금 기준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과 고급 식사(파인다이닝) 등 예약 기반 음식점,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위약금을 이용 금액의 40%까지 설정할 수 있고 일반 음식점은 20%까지로 정할 수 있다. 사업자는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한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강화

올해 보증공급 목표 8200억원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1일 "2026년 설립 30주년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광주신보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지역 소재 15만 4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누적 보증공급액 7조 7712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공급(4만 8000건·8700억원), 광주시 청년창업 특례 보증공급(8400건·2000억원), 코로나19 위기기간 보증공급(8만 1200건·1조 8000억원), 관광사업자 위기·대우위니아 사태·2025년 폭우 피해 등 지역 현안 대응 보증공급(500개 업체·326억원) 등 지역의 어려운 상황에 맞춤형 금융 지원을 마련해 왔다.

광주신보는 설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보증공급 목표를 8200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조직·업무 혁신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가장 먼저 고객지원팀을 신설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재기 지원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확대, 보증지원 이후 사후관리 및 심사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 자체 개발한 '보증품의지원시스템(G.A.S.S.)'을 전면 도입해 직원들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심사 전문성과 현장 중심 지원 역량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는 '1·2·3운동(1일 이내 상담 예약, 2일 이내 실사, 3일 이내 승인·약정)'을 강화해 신속한 금융지원에 나서는데 한층 고공리 금융상품 이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저금리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 보증 사업도 신설할 방침이다.

염규승 광주신보 이사장은 "광주신보는 지난 30년간 지역경제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보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난해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 역대 최대 매도

기관 순매수액은 역대 2위

수익률 외국인 개인 2배 이상

지난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피' 고지에 안착하며 고공행진했지만 개인은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수익률 승자는 외국인으로, 개인 수익률의 2배를 달성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에서 26조3670억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는 연간 개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1위다. 직전 역대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12년 기록한 15조5500억원이었다.

지난해 코스피가 75.6% 올라 주요 20개국(G20) 중시 중 상승률 1위를 차지했으나, 개인은 오히려 이를 차익 실현 기회로 여기고 대거 판 것이다.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 역시 4조6550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였다. 상반기 국내 정치·경제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우려에 대거 순매도한 여파로 분석된다.

반면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19조6930억원 순매수했다. 지난해 기관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역대 1위는 2008년 기록한 23조2576억원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증시가 휘청인 바 있다.

한편 투자자별 수익률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외국인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01.6%로, 같은 기간 개인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평균 수익률(88.0%)의 2.3배에 달했다. 기관 수익률 역시 132.3%로 개인보다 높았다.

'소평 리스트'를 세부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국인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9조 5600억원에 달했다. 뒤이어 한국전력(1조4900억원), 카카오(9420억원), 한화에너지(9070억원) 등이었다.

반면 개인은 네이버(3조3550억원)를 가장 많이 담았으며 SK하이닉스(2조1460억원)를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담아 눈길을 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